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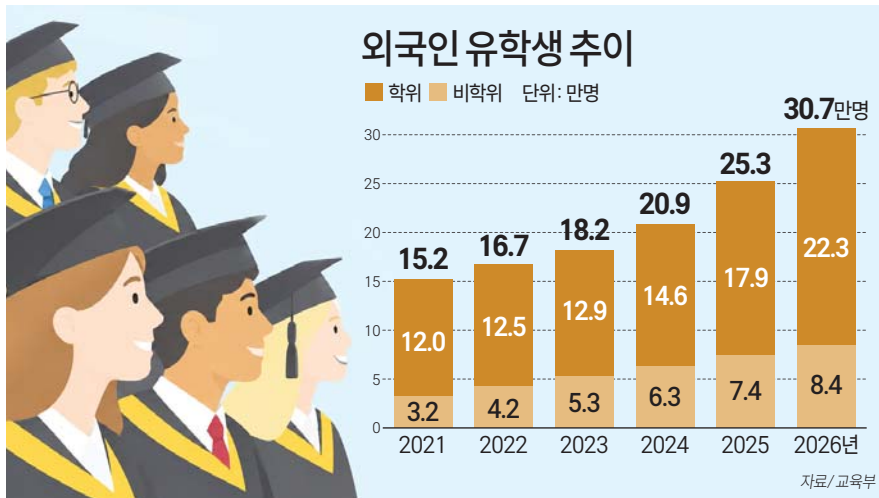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 유치 넘어 취업·정착 길 열어야

올해 외국인 유학생 30만 7464명 학위 24.6%, 비학위 13.5% 증가 박사 졸업생 중 81.3% 완전 출국 정부, 지역산업 연계 정책 구체화 교육부,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 확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국내 산업 인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나섰다. 아직 유학생이 실제 국내 산업 인력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아, 유치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연결하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30만 74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만 4030명(21.3%) 증가한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의 증가세도 두드러졌



다. 올해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22만 3191명으로 전년보다 4만 4001명(24.6%) 증가했다. 비학위과정 유학생도 8만 4273명으로 13.5% 늘었다. 단기 연수 등에 한정되지 않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학생층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9만 6834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7만 8890명(25.7%), 우즈베키스탄 2만 876명(6.8%), 네팔 2만 118명(6.5%), 몽골 1만 7189명(5.6%) 순이었다.

전공별 유학생 규모도 국내 산업 수요와 맞물려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신규 입학생은 11만 7333명으로 2019년보다 75% 증가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인력 수요와 맞닿은

전공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크게 늘었다. 임상병리·간호·돌봄 관련 분야는 2019년 대비 296%, 반도체 관련 분야는 138% 각각 증가했다.

다만 이런 증가세가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2019~2025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15만 2107명(교환학생 제외)을 분석한 결과, 졸업 직후 출국자를 제외한 취업자는 2만 2576명으로 취업률 34.3%에 그쳤다. 이 가운데 54%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었고, 이들 중 90%는 졸업 후에도 수도권에서 취업했다.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국내 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오히려 낮았다. 올해 3월 기준 졸업자 15만 2109명의 체류자격을 살펴본 결과, 완전 출국 비율은 박사 81.3%, 학사 71.8%, 석사 71.3%, 전문학사 26.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유학생을 지역 산업의 인력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지역 제조업 인력 확보를

위해 16개 전문대학을 '육성형 전문기술 학교'로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연간 최대 800명의 숙련 외국인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6곳을 선정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까지 늘어나고 국내 산업 수요와 맞닿은 분야의 유입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 뿐 아니라 학업 이후 국내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의 취업 지원과 함께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질적 관리 정책이 실제 취업과 정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유학생 30만 시대의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특수교육 학생 느는데… 교사는 4663명 부족

학생 4명당 1명 배치 법정기준 미달 경기도 특수교사 부족 1685명 '최대' 중도퇴사자 862명… 정년퇴직자 3배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그들을 가르칠 교사는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특수교사 배치 정원은 법정 기준상 필요한 인원보다 4663명 부족해, 필요한 교사 5명 중 1명꼴로 채우지 못했다. 교원 부족 속에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특수교사도 800명을 넘어섰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치 정원은 1만 8046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국적으로 2만 2709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배치 정원은

필요 인원의 약 79.5%에 그쳤다.

지역별 교사 부족 규모도 차이가 컸다. 경기도가 1685명으로 전국에서 부족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교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다. 초등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법정 배치기준인 4명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부산·인천·제주가 각각 4.5명, 대전이 4.4명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웃돌았다.

교원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을 채우기 전에 교단을 떠나는 특수교사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퇴사자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의 3배를 웃돌았다.

특수교사는 일반 교사와 별도의 자격과

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갖춘 뒤 교육청이 유아·초·중·고등 특수 분야별로 정한 선발 인원내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는 구조다. 일반 교원과 자격·선발 체계가 구분돼 있어 학령 인구 감소로 일반 교원 수요가 줄더라도 이를 특수교사 부족분에 곧바로 충원하기는 어렵다.

지역에 따라 신규 교사를 확보할 기반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 내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정규교사뿐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대신할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연고 중도탈락 2012명… 의대 쏠림 여파

중도탈락자 중 64.5% '자연계' 의대진학 재도전·편입 움직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중 자연계열 비중이 인문계열의 약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의 의학계열 재도전 움직임 등이 중도탈락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

별 중도탈락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연고 중도탈락자는 모두 2012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연계열이 1297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인문계열은 654명(32.5%), 예체능계열은 61명(3.0%)이었다. 자연계열 중도탈락자가 인문계열의 약 2배에 달한 셈이다.

서연고의 중도탈락자는 최근 4년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2021년 1971명에서 2022년 2131명, 2023년 2126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496명까지 증가했다. 지

난해에는 2012명으로 전년보다 484명(19.4%) 감소했지만, 2022년 이후 4년 연속 2000명을 웃돌았다.

종로학원은 서울 상위권 대학 자연계열 학생들의 중도탈락 증가 배경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계열 재도전 움직임을 꼽았다. 최상위권 아공계 학과에 진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연고 재학 중에 있는 지방권 학생들의 재입학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이천시,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18만㎡ 규모… 반도체 소부장 유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천시와 손잡고 총 18만㎡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GH는 지난 23일 본사에서 이천시와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6만㎡ 규모의 3개 사업지구를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GH와 이천시는 반도체 앵커기업 주변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을 집적화한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호원읍·율면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천시를 비롯한 자연보전권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6만㎡로 제한돼 대규모 계획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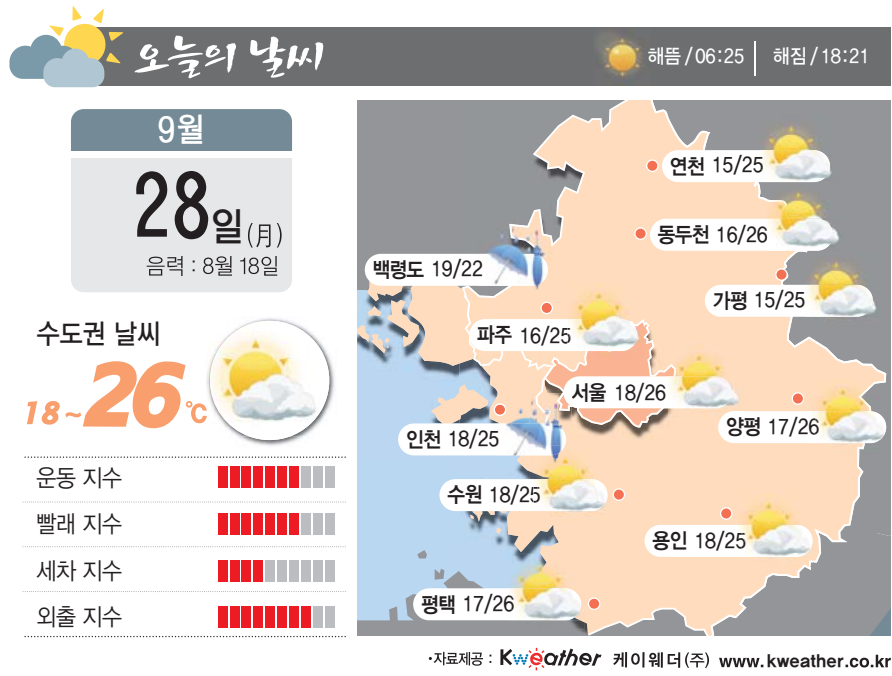


성수석 경기 이천시장(사진 왼쪽)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3일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천시

규제 개선 건의로 지난해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최대 30만㎡까지 연접개발이 가능해졌다.

GH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입지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투자심의 등 내부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해 2029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천(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트럼프, '7일 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제안 거절 /사진 뉴시스
▲ 中 자이언트 판다, 미국 동물원으로…정상회담 사흘만

▲ 러 외무 "유럽, 우크라 평화협상 방해 위해 모든 수단 동원"
▲ 러 매체 "李대통령, 젤렌스키에 살인자·배신자" 왜곡 보도

▲ 日 전 방위상 우크라 방문 조율…자위대 드론 도입 추진
▲ 가자지구 공습 이스라엘군, 하마스 정예부대 2명 제거